

Theme 1 신자유주의와 한국사회

신자유주의는 영국의 '마거릿 대처' 전 수상이 경제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도입한 방법이다. 이는 자유방임적 자유주의의 극형태로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낳았다. 세계적인 조류인 신자유주의 체제를 요구받고 있는 작금의 상황에서 신자유주의의 한국적 수모에 대해 다루어 보고자 한다.

● 경제 - 시장원칙 통용될 수 있다

경제주체의 자율적인 의사결정 보장해야

정 부수립후 최초의 여·야 정권교체, 40년 경제개발 흔적의 붕괴 등 최근 우리가 겪고 있는 사회 변화가 심해지면서 기존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각 분야에서 새로운 사조가 대두되고 있는데 이를 일단 '신자유주의'의 등장이라고 정의하자. 이하 신자유주의가 한국경제에 어떻게 나타나고 있으며 그 영향이 무엇인지를 알아 보기로 한다.

우리는 이제껏 자본주의경제, 시장경제, 자유시장경제라는 개념을 큰 구분이 없이 혼용해 왔는데 이들이 '신자유주의'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보자.

먼저 시장경제란 재화와 서비스의 거래가 시장에서 가격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말하는데 이때 '정부·기업·가계'의 경제 3주체가 남의 간섭없이 자신의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될 때 자유시장경제라고 한다. 자본주의경제란 사유재산권 제도를 인정치 않는 사회주의경제와 대비할 때 강조되는 개념으로서 시장경제에 '사유재산권의 존중'이라는 가치가 추가될 때 이를 말한다.

그럼 경제에 있어서 신자유주의란 무엇인가. '자유'라는 글자가 내포하는 바처럼 위 세가지 중에서 자유시장경제에 좀더 접근 하자는 뜻으로 풀이하면 되겠다. 그것은 현재 우리

부실한 기업을 도태시키는 '적자생존' 원칙인 신자유주의는

고비용, 저효율의 경제구조를 고치는데 효과적이지만 많은 문

제점도 내포하고 있다

가 채택하고 있는 경제체제가 '시장경제'에 가깝지만 결코 '자유시장경제'라고 말하기에는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이다. 시장경제가 분배와 효율을 동시에 고려하는 체제라면 자유시장경제는 효율을 더 중시해 경제 3주체의 의사결정에 철저한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다. 그래서 자유시장경제하에서는 경제활동의 결과로 나타나는 '빈익빈, 부익부' 현상에 대해서도 패념치 않을 정도를 말한다. 물론 시장경제하에서는 공정한 분배나 형평 등을 위해 정부의 개입이 어느정도 정당화된다.

일단 시장을 다시 경제주체의 자유에 맡기면 독점이나 '빈익빈, 부익부'같은 소위 '시장실패'의 여지는 다시 생길 여지가 있다고 봐야 한다. 또한 대기업들이 내는 세금이나 개인 고소득자들이 많이 내는 세금부담도 신자유주의의 체제 하에서는 지금처럼 단순히 많이 번다고 해서 50%정도의 높은 세율을 적용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능력있는 사람에게서 많이 받아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자는 발상은 신자유주의와는 안 맞는다는 얘기다. 다만 이때 정부의 역할이 있다면 아주 나쁜 결과에 대해서만 사후적으로 보완하는 일일 것이다. 노인, 신체 부자유자들에 대한 사회복지 차원이 고작일 것이다.

그러나 요즘 우리가 직면하는 고비용, 저효율의 경제구조를 뜯어 고치는 데에는 큰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다. 요즘 외국인에게까지 과감하게 팔자고 논의되고 있는 전기, 가스, 수도물, 담배 등 공기업의 민영화가 좋은 예이다. 지금까지는 민간에게 맡기면 독점이 돼 가격회포가 우려되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운영해 왔는데 오히려 비효율만 생겨 궁극적으로는 국민의 세금만 낭비하고 있는 셈이다. 더이상 공공성 등을 이유로 효율을 떨어뜨리는 정부의

개입은 용납치 못하게 된다.

한국경제에 신자유주의가 정착된다면 답은 간단하다. 각 경제주체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최대한 존중하면 된다. 그러려면 모든 것을 정부가 하는 것이 효율적이거나 또는 공평하다고 믿는 발상부터 버려야 한다. 오히려 정부가 하니까 각종 부정부패나 비효율만 초래하고 있는 셈이다. 우리나라 국민총생산의 약 55%정도를 정부가 직접 배분을 하니까 그만큼 국민경제에서 새 나가는 몫이 많아지고 있다. IMF체제를 불러 온 것도 기업이나 금융기관의 잘못 이전에 근본원인은 정부의 과다한 개입과 그에 따른 행정규제에 있다고 보는게 기업의 입장이다. 예컨대 기업이 거대한 자금을 투자해 망했을 때 그대로 쓰러지게 놔 주었다더라면 우리 기업들이 IMF사태를 초래할 정도로 무모하게 남의 돈을 빌려서 과잉투자를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은행도 마찬가지다. 은행이란 남의 돈을 끌어들여 기업들에게 약간 높은 이자를 붙여 대출해 주고 그 차익으로 먹고 사는 기업체다. 때문에

자기가 남(예금자)의 돈을 떼이지 않으려면 빌려주기 전에 철저하게 상대의 사업성이나 신용을 따지게 마련이다. 그런데 이제껏 어떤 은행이건 정치권이나 정부의 압력이 있으면 이런 기본적인 의사결정마저

제쳐두고 지시에 따랐는데 바로 이런 자율적인 결정을 회복 하자는 게 신자유주의의 정신이다.

수없이 예를 들 수 있겠지만 한마디로 말해 시장경제의 기본원칙인 '적자생존(適者生存)'이 통용되도록 하면 된다. 기업이건 은행이건, 부실한 자는 시장에서 사라지게 하자는 것이 신자유주의를 우리경제에 뿌리내리게 하는 길이다. 마치 인체에 불필요한 부분은 땀이나 대·소변을 통해 배출될 때 몸이 건강한 것처럼 한국경제라는 시장에서 엉터리(부실)가 발을 못붙이도록 하자는 것이 신자유주의의 본질이다. 이점이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시장경제와 다른 점이다. 또한 누구나 시장에 들어 오거나 그곳에서 활동을 하는 것은 자유롭게 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신자유주의에 바탕을 둔 시장경제는 지금과 다른 모습이 될 것이다. 현재 미국경제가 세계에서 큰 소리치는것도 이 때문이라고 본다.

강 응 선
(매일경제 논설위원)

● 노동 - 노동시장 유연화가 야기한 대량해고

고용불안, 노동의 자본종속 심화시켜

지금 한국사회에 신자유주의의 태풍이 불어닥쳐 한국사회의 기본적인 틀을 뒤흔들고 놓고 있다. 물론 지금까지 한국 경제정책의 기본방향도 신자유주의에 바탕을 두고 있었으나 그것은 점진적인 것이었다.

그러나 작년 연말 IMF 구제금융 신청을 계기로 한국경제는 IMF와 양해각서를 체결함으로써 그 신탁통치 아래로 들어가게 되었다.

이 양해각서의 내용은 성장물의 하향조정, 재정금융 긴축정책 실시, 부실 금융기관 정리, 무역 및 자본자유화, 기업경영의 투명성 제고, 기업의 구조조정, 노동시장의 유연화 등 전형적인 신자유주의의 방향이었다.

고전학파의 자유주의나 그 현대판인 신자유주의는 개인의 창의와 자유로운 활동 그리고 시장의 경쟁을 중요시하는 사상이다. 그것은 국가와 경제의 관계에서 보면 경제에 대한 국가간섭이나 보호를 국내외적으로 제거하고, 경제활동을 기본적으로 시장이라는 '신(보이지 않는 손)'에게 맡기는 것이다.

시장은 개인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보장하고 경쟁을 통하여 생산력을 비약적으로 발전시킨다. 반면에 시장은 경쟁을 통하여 적자생존의 법칙을 관철시킴으로써 승자에게는 모든 영광을 제공하고 패자에게는 죽음을 내린다.

시장은 모든 개인이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만들지만 언제나 강자와 승자의 손을 들어준다. 따라서 시장은 결국 선진자본의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해 주는 논리이며 후진자본이나 약자를 도태시키는 논리이다. 선진자본은 후진국의 전자본주의 부문(농업, 자영업 등)을 파괴하여 자본운동 내부로 편입시키고, 경제적인 국경을 무너뜨려 그 활동영역을 지구촌 구석구석으로 뻗으면서 임여가치 수취의 규모와 기회를 확대시킨다.

한국경제는 이제 재벌이라는 보호의 틀을 깨고 구조조정을 함으로써 국제적으로 선진자본과 경쟁하지 않으면 안되고 중소기업들은 더욱 치열한 경쟁속에 내몰리게 되어 있다. 자유화, 개방, 개혁은 수출주도형 경제성장을 이룩해 온 한국경제에 있어서는 외국의 압력 이전에 국제경쟁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피할 수 없는 과제이기도 했다.

그러나 급격한 자유화, 개방, 개혁은 약자인 노동자에게는 더욱 큰 시련을 안겨주고 있다. 이것이 노동 영역에 미치는 가장 큰 영향은 우선 대량실업의 발생이다. 경

쟁력 강화를 위한 자본의 합리화 운동은 필연적으로 대량의 실업을 유발시킨다. 통계청에 의하면 작년 10월 45만여명(2.1%)에 불과했던 실업자가 금년 3월에는 138만명(6.5%)으로 폭증했다. 여기에 불안정한 취업자, 무가급부담 중상자, 실망실업자 등을 합치면 현재 실업자수는 통계에 잡힌 것보다 훨씬 더 많은 것이다.

한국은행에 의하면 공식통계에 잡히는 실업자만도 금년말에는 150만명, 경우에 따라서는 200만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계속되는 중소기업의 도산, 재벌의 구조조정의 본격화, 공기업의 민영화 등은 실업자를 무더기로 양산할 것이다.

이것은 노동시장의 유연화 정책과 맞물려 있다. 그동안 자본측에서 주장해 온 노동시장의 유연화를 위하여 작년도의 노동법 개정에서 변형근로시간제, 정리해고제 제도로써 보장하고, 금년도의 노동법 개정에서 파견근로제를 도입하고, 정리해고제의 유예기간(원래는 1999년 3월부터 발효예정)을 없애버렸다. 그결과 현재 취업하고 있는 노동자까지도 언제 해고될지

경쟁력강화를 위한 자본의 합리화운동

은 대량실업을 유발시켰으며 전통적으로

평생고용이 보장되었던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과 내수시장 위축, 기업도산의 악순

환을 낳고 있다

신자유주의란?

자본주의 사회의 계급적 모순에 대한 보편적 파악 없이 공리주의적 기초의 부분적 수정과 기존의 법과 정치체제를 통한 개혁으로는 자본주의 사회현실에서 나타나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이에 신자유주의는 자유방임적 자유주의의 결함을 인정하여 국가에 의한 사회정책 등의 필요를 승인하면서도 이상주의적 개인주의를 밑바탕으로 하여 자본주의의 자유기업 전통을 지키려는 사상을 말한다

● 문화 - 영화에 투영된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기 노동자의



영 화는 사회와 필연적으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다. 어떤 형식을 취하건, 어떤 영화언어를 사용하건 동시대를 살아가는 연출자, 작가, 배우의 메시지가 투영되기 때문이다.

거시경제의 맥락인 신자유주의체제 역시 영화와 문화에 고스란히 반영되고 있다. 신자유주의체제는 결국 실생활 경제활동과 경제주체인 사람들과 하나하나에 파급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호흡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빠질수 없다.

고비용, 저효율의 경제구조를 뜯어 고치겠다는 신자유주의체제는 대규모의 구조조정과 정리해고를 낳았고 그 인파의 인간군상, 삶의 편란 등을 담은 영화나 소설이 등장했다. 몇 년전 해외에서 베스트셀러였던 '절벽산책'은 이제 남의 이야기가 아니다. 영화에 나타나는 구조조정은 노동자의 현실에 대한 표상이자 인간의 리얼한 삶을 담은지라 더욱 가슴을 대다. 때로는 울음이 나올만한 상황을 한바탕 희화하여 웃어넘기고 다시 살아나갈 힘을 북돋우는 영화들이 있다.

영국의 대처수상 시기의 구조조정은 뼈를 깎는 고통을 수반했던 것 같다. 영화 브래스드 오프(Brassed Off)와 풀 몬티(full monty)는 영국의 구조조정기 폐광 노동자와 철강기술실업자들의 삶을 담은 영화다. 브래스드 오프는 폐광 위기에 처한 탄광노동자들의 절망을 관망함으로써 지극히 냉철한 정황을 한바탕 희화하여 웃어넘기고 다시 살아나갈 힘을 북돋우는 영화들이 있다.

모르는 고용불안에 휩싸여 있다. 전통적으로 관습적인 평생고용이 보장되어 있던 정착민이었던 노동자들이 이제는 완전히 유목민이 되어 떠돌아 다니다가 되었고, 생계의 기반이 뿌리째 흔들리고 있다.

그 이외에도 노동자들에게 미친 영향은 많다. 대부분의 기업에 있어서 임금의 동결사감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임금체제는 과거의 연공급적인 성격에서 급격히 엄격급으로 바뀌고 있다. 각종 기업복지제도의 축소, 무가급부담의 축소가 진행되고 있다. 반면에 물가와 세금의 인상에 따른 노동자 가계부담의 증가가 초래되고 있다.

노동자 가계소득의 급격한 감소는 내수시장의 급격한 위축을 가져와 기업도산과 실업자 급증의 악순환을 되풀이 할 것이다. 또한 고용불안은 노사관계에 있어서 특히 기업별 노조가 중심이 되어 있는 우리 사회에 있어서는 노동조합의 힘을 무력화시킬 것이다. 전반적으로 노동자기계의 파산, 기업에 있어서 노동자의 권리 약화와 자본에 대한 종속성 심화현상이 나타날 것이다.

다른 한편으로 범죄의 증가, 실업자 동맹의 결성과 투쟁 등 사회불안이 급증할 것이다.

전 기 호
(경제통상학부 교수)